부처합동	보 도 자 료	2015. 11. 16(월)	
		작성·문의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실 조규산 과장(Tel. 044-200-2497)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최도영 과장(Tel. 02-2110-194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이원주 과장(Tel. 044-203-5240)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이성훈 과장(Tel. 044-201-3909)
11.16(월) 16: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정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속도 높인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차관회의 열어 '정비 개선방안' 확정
- 전체 투자규모 확대 및 난립·재난립 방지대책 마련, 지중화 사업도 독려키로
- 추 실장, "관계기관 협업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케이블을 구축할 것"

□ 정부는 11.1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초고속 인터넷·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하여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는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년('13~'17)**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5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 동 계획에서는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에 국조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 및 **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 TF**('15.5~10)를 구성하여 2년('13~'14)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 관계부처(국조실, 미래·산업·국토부), 대학교수, 전문 연구원 등
* 민관합동 TF회의 5회, 현장점검 1회 개최

○ 동 TF에서는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 뿐 아니라 사업에 따른 **국민안전 체감도**와 **도시미관의 개선효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 평가결과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 '13~'14년 투자목표액(6,716억원) 대비 **103%**(6,898억원) 투자
* '13~'14년 전주 정비계획(133,316본) 대비 **103%**(137,630본) 정비

○ 정비결과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어 정비 구역의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 정비완료지역 주민만족도 : **생활안전 개선(83.6%)**, 도시미관 개선(79.5%)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6 16:14:56

○ 따라서, 현행 **사업자 정비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정비**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확대 >

○ 2년('13~'14)간 당초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비가 필요한 전주 물량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수준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 기존 '정비 종합계획' 대비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재수립한다.

< ②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공중케이블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건물·1인입*** 원칙,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 및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이다.

*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선을 하나로 모아 1건물당 1인입으로 설치

○ 또한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 및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다.

* 가입자선 : 건물 옥상 등에서 댁내로 연결되는 방송·통신선

< ③ 지중화사업 활성화 >

○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한다.

○ 아울러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지자체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독려**한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부 고시)' 개정

○ 또한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 등을 **시험 검증 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예) 마이크로트렌칭(Micro-Trenching) 공법 : 다이아몬드 칼날을 이용하여 폭 0.01~0.03m, 깊이 0.07~0.3m로 광케이블 굴착·매설기법

< ④ 시급성 및 주민 참여를 고려한 사업지역 선정 >

○ 거주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예, 동계올림픽을 앞둔 평창 등)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 또한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정비 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기존에는 지자체·전파관리소·방송통신사업자·도시미관 전문가 등만 참여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6 16:14:56

< ⑤ 기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 >

○ 동일 전주에서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자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아울러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이용**을 추진한다.

○ 또한 **사업자간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의 사양이 달라** 공동사용은 물론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하여 **관련 기술의 표준안**을 마련한다.

* 사업자간 광케이블 및 모뎀 커넥터(KT, LGU+ : APC 타입, SKB : PC 타입)가 상이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추 실장은 또, "공중케이블을 잘 정비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ICT 강국** 뿐 아니라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 **관계부처**는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매년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 1 세부 개선과제 추진일정

구 분	일련번호	주요내용	조치사항	반영시기	주관부처
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확대	1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규모 확대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 확대를 반영한 투자계획 재수립	'15.말	미래부 산업부
공중케이블 난립 및 재난립 방지	2	공중케이블 설치기준 강화	·공중케이블 설치기준을「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대통령령)」에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15.말	미래부
	3	서비스 종료된 공중케이블의 철거 기준 강화	·사업자는 서비스 종료된 공중케이블의 철거내용을 기록관리 하고, 정부는 이를 점검토록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15.말	미래부
	4	재사용이 불가능한 공중케이블의 철거방법 개선	·고객이 서비스 변경시 개통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폐선 철거방안 마련	'16.상	미래부
	5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 제도 도입	·인터넷 가입회사 변경시 신규회사는 기존 공중케이블을 재활용(시범사업후 도입 결정)	'16.하	미래부
	6	조가선의 공중케이블 설치제한 완화	·전주 강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조가선의 케이블 설치제한 완화	'16.상	산업부 미래부
	7	IoT 기반 공중케이블 감시체계 마련	·공중케이블 무단설치 감시기술 개발을 통해 공중케이블 난립 방지	'17.상	산업부
	8	공중케이블 정비공법 개선	·난립 우려되는 인입구간의 미관 개선을 위해 Y형모듈 등 다양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후 도입 결정	'16.하	미래부
지중화 사업 활성화	9	지중화 관련 도로 점용료 감면	·지중화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율 확대 검토 (도로법시행령 개정)	'17.상	국토부 산업부
	10	지자체의 지중화사업 참여 확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 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 기준 하향(50→40점)	'15말	산업부
			·지자체 단체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독려	매년	미래부 산업부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6 16:14:56

구 분	일련번호	주요내용	조치사항	반영시기	주관부처
	11	지중화 공법 개발 보급·보급	·지중화 고시에 Pole-type 공법 적용시 가점 부여	'15.말	산업부
			·Pole-type 공법 등 신공법 단계적 개발· 보급	'16.상	
	12	공중케이블의 지하매설 기준 완화	·마이크로트렌칭 공법 검증 후 적합시 매설기준 완화방안 도출	'17.말	국토부 미래부
정비 지역 선정	13	공중케이블 정비 대상지역 확대	·현행 20개 대도시 외에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50만명 이하 도시도 정비하는 방안 마련	'16.상	미래부
	14	주민참여를 고려한 정비지역 선정	·주민참여도가 높은 지자체에 정비물량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16.상	미래부
	15	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조직 구축	·주민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정비협의회를 주민참여 구조로 변경	'16.상	미래부 지자체
사업의 추진 효율화	16	통합정비 조직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1개 정비구역을 1개사가 통합정비하거나, 통합정비조직 구성 등 시범사업 추진	'16.상	미래부
	17	한전 및 KT전주 상호간 공동이용 추진	·건물 인입구간에서 공중케이블의 상호 교차로 정비효과를 저감시키지 않도록 전주 공동이용 방안(전주 이용료 감면 등) 마련	'16.상	산업부 미래부
	18	정비지역내 전주 교체정보 제공	·공중케이블 정비지역내의 전주교체 정보 제공 및 우선적인 전주교체 실시로 이중정비 방지대책 마련	'15.말	산업부
	19	공중케이블 관련 장비의 표준화	·사업자간 공중케이블 및 장비가 달라 공동사용 및 정비가 어려우므로 이를 표준화하는 방안 마련	'16.하	미래부
	20	홍보활동 강화	·홍보활동(반상회보, 포스터, 현수막 등) 강화 및 라디오 방송기획 등 홍보 다양화로 주민협조 유도	'16.상	미래부

참고 2 공중케이블 정비 사례

□ 늘어진 공중케이블 높이(지상고)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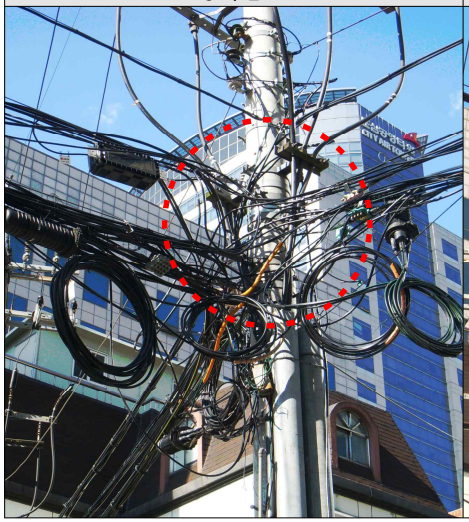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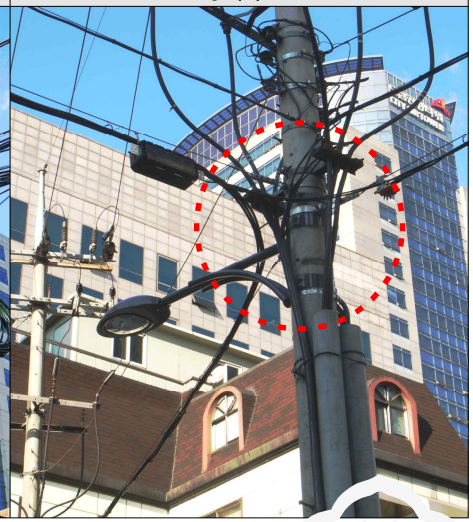
정비전	정비후
	

□ 과도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 및 통신장비 철거

정비전	정비후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6 16:14:56

□ 복잡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 정리

정비전	정비후
	

□ 전주 및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지중화)

정비전	정비후
	